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10월 일 (제343회)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안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제안연월일	2015년 10월 일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5. 10. .
제 안 자 : 행정문화위원장

1. 제안이유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일부 논의 중 청주시 국회의원의 의석 수를 4석에서 3석으로 축소하려는 논의가 있다.
- 청주시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전국 최초의 자율적 통합시의 모범적인 사례이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는 통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이익 배제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청주시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4석에서 3석으로 축소한다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위반하는 법률위반 행위이며, 법률적 정당성을 위배하는 행위이다.
- 또한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축소한다면 인구 154만여명의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9석인데 반해, 인구 158만여명의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7석으로 광역자치단체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 그리고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는 지방의회 의원 의석수를 축소하게 되어 주민의 손으로 지역을 가꾸는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 뿐만아니라 충북의 괴산군을 보은·옥천·영동군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통합선거구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배경, 전통적 일체감, 교통·지리적 여건, 교육·사회·문화·경제·주민정서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인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선거구 획정기준에도 타당하지 않다.
-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의 대표성 확보, 지방자치의 원칙 준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선거구 획정 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하고자 함.

2. 주 문

- 붙임 건의문과 같음
- 붙임 :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문

3. 건 의 처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충청북도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님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님 !

최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일부 논의 중 청주시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4석에서 3석으로 축소하려는 논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전국 최초의 자율적 통합시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는 통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이익 배제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청주시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4석에서 3석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위반하는 법률위반 행위이며, 법률적 정당성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축소한다면 인구 154만여명의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9석인데 반해, 인구 158만여명의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7석으로 줄어들어 광역자치단체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는 지방의회 의원 의석수를 축소하게 되어 주민의 손으로 지역을 가꾸는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충북의 괴산군을 보은·옥천·영동군 선거구에 편입시키려는 통합선거구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배경, 전통적 일체

감, 교통·지리적 여건, 교육·사회·문화·경제·주민정서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인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선거구 획정기준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의 대표성 확보, 지방자치의 원칙 준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선거구 획정 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를 강력히 반대하며, 충청북도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과 광역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위배하며, 플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통합청주시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통합청주시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적 특성을 인정한 선거구 획정기준에도 어긋나는 괴산군을 보은·옥천·영동군 선거구에 편입시키려는 통합선거구 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5년 10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